

# 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어렵다”

(경찰청장 후보)

## 국회 인사 청문회

“공소권 없어 조사 못해  
靑 보고, 운영체계 따른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KBS 수신료 인상 필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 정보 유출도 경찰 수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지적에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정보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내부 보고 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 수사 규칙, 치안상황실 운영 규칙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그의

전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일각에서 부른 데 대해 “우리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앞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서는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관해) 상당 부분이 파악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

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료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김태년 “국회·靑 세종시로 옮겨야 부동산 문제 완화”

###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통합당 “이미 위헌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20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 제1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

·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주택을 불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는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북미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개성공

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일탈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고위 공직자 성 비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힘 쓸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한 만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며 “고용보합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

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부양자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입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등 이전 방안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현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다만 협치는 이전과 달리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문 대통령 “박지원 북과 내통 발원” 부적절

### 통합당에 유감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박 후보자에 대해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 되는가”라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색깔 공세로,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흠집 내기와 낡은 색깔론을 펴고 있지만, 정치적인 공세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민주 광주시당·전남도당 위원장 선출 시작

### 대의원·권리당원 투표로 결정…합의 추대 주목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을 결정했다.

도당은 21일 후보자 등록 공고에 이어 24일 후보자 등록을 하기로 했다.

경선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대의원(50%)과 권리당원(50%)의 온라인·ARS 투표로 진행된다.

경선 결과는 다음 달 8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대신해 열리는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지침에 따라 대의원대회는 상무위원회로 대체하고 합동 연설회와 토론회는 열리지 않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24일 선관위를 열

고 시당위원장 선출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선 방식은 전남도당과 같으며 8일 상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시당과 도당 모두 합의 추대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에서는 이병훈(동남을)·조오섭(북구간)·민형배(광산을) 의원이, 전남에서는 신정훈(나주·화순)·김승남(고흥·보성·강진·장흥)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의원 간 합의 추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합의 추대가 안 되면 경선으로 선출하고 1명으로 합의 추대하면 상무위원회를 열어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이병훈, 식품위생법 등 민생·안전법안 5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은 20일 입산부 및 영·유아의 유해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민생·안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입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 판매, 유독기구 제조·판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부당하고 시에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또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도 행정입원의 경우처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안전

도를 높이고자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은 “민생의 현장에서 민생 개선, 생활 안정을 목표로 길어 올린 민생개선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치적 이해득실과 큰 관련이 없어 소외되기 쉬운 국민생활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꾸준한 민생, 안전입법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물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